5·18 30주년 결산 ㊥ 거듭나지 못한 '광주'

반목·갈등… 그들만의 오월

5·18 30주년 전야제에서 518명의 시민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산 4배 이상 늘었지만 효과는 반감

기념식 쪼개져도 조정역할·노력 없어

30주년을 맞은 '5·18'은 새로운 뜻을 세워야 할 이립(而立)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는 5월 정신을 광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 목표는 사라진 채 반목과 갈등 속에 행사 기관들만의 잔치로 치러졌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기념행사가 둘로 나뉘어 치러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초래해 아쉬움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는 30주년인 점을 감안, 예년 예산의 4배 이상이 책정됐으나 규모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5·18기념행사 예산은 지난 해 4억2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18억원으로 14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5·18 20주년 기념행사 때에는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국국토종단대행진과 5·18다큐멘터리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지역민은 물론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기획되면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다.

올해가 30주년인 점을 염두에 뒀다면 일회성 행사가 아닌 40주년을 넘어 50주년까지 이어질 역사적 행사를 고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처음 열린 전국 제1회 5월 가요제 '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타지역에서 진행된 5·18 기념행사는 전국화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사위나 5월 단체를 막론하고 광주시민이 직접 나서서 함께하고 지원했어야 한다.

타 지역 행사위들은 기념행사장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등 다양한 난관에 봉착했다. 30주년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기념행사를 치를 경우, 최소한 행사위나 5월단체·기념재단 또는 시민 중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기본이다.

타 지역 기념행사에 예산만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를 기억하고, 기념해 준 이들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우선돼야 함을 간과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올 초 30주년을 앞두고 5월 단체들이 통합된 모습으로 5·18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을 되찾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5월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로 거듭나 5·18기념행사는 물론 5월 정신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주길 바랐던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다.

이와 함께 5·18 기념식이 보훈처와 행사위 및 5월 단체의 행사로 나뉘어 치러지기까지 지역에서 어떠한 조정역할이나 해결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올 수능 가늠자 6월 모의평가

EBS 출제 관심 집중

올해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내달 10일 치러진다.

올해부터는 교육당국이 EBS 수능교재를 50% 이상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험생은 남은 기간 EBS 교재와 강의를 우선으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입시전문학원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언어영역은 문학과 비문학 지문, 제시 자료(그림이나 표 포함), 듣기나 쓰기문제 소재의 상당 부분이 EBS 교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3월 수능-EBS 연계 강화 방침을 밝히며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개념·원리활용 ▲교재의 지문그림·자료표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및 문항의 변형(축소·확대·결합·수정)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문학은 교재에서 다룬 글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그와 비슷하거나 다른 측면에서 기술한 글을, 문학은 교재에 실린 작품의 다른 대목이나 앞뒤 내용을 붙이거나 줄인 지문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 측은 "교재에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적응하고 비문학과 문학은 어려운 작품, 어려운 내용의 글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BS 교재의 개념, 원리 활용 등 수능과 기본적인 연계 방침은 모든 과목에 적용되므로 수리영역 역시 대비 방법은 언어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도형을 이용한 무한등비급수의 합 구하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수학외적 환경과 관련한 지수 또는 로그 식 구하기 등은 최근 5년 연속 수능에서 출제됐으므로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소한 EBS 교재에서 이들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 출제됐는지 정도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학원은 강조했다.

외국어영역의 경우 언어와는 달리 EBS 수능 교재 지문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문제 유형은 크게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학원은 그러나 "언어와 마찬가지로 교재에 나오는 도표, 그림 등의 자료에 주목하고 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불심검문 권한 강화 … 소지품 검사까지

만취 소란자 강제 격리도

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만취소란 행위자는 강제로 격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이 대안에는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대상자가 흉기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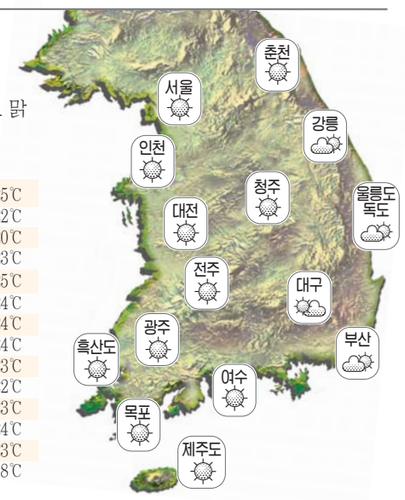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해짐 19시 38분 달뜸 19시 10분 달짐 04시 19분

자외선 주의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조금	13/25℃
목 포	구름조금	13/22℃
여 수	구름조금	13/20℃
완 도	구름조금	13/23℃
구 례	구름조금	12/25℃
해 남	구름조금	13/24℃
장 흥	구름조금	12/24℃
고 흥	구름조금	12/24℃
순 천	구름조금	12/23℃
영 광	구름조금	12/22℃
진 도	구름조금	13/23℃
전 주	구름조금	12/24℃
남 원	구름조금	11/23℃
흑산도	구름조금	12/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34 13:29	06:48 18:48
여수	08:17 21:03	02:23 14: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금)	29(토)	30(일)	31(월)	1(화)	2(수)
날 씨						
최저/최고	13/25	14/25	15/25	15/26	14/26	14/27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 시내버스 노선 일부 변경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로 변경된 광주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진월 07·지원 53·풍암 61 등 3개 노선을 제외한 20개 노선이 정상운행 한다.

옛 전남도청 분수대를 U턴 운행하는 3개 노선 중 지원53·풍암61은 분수대 통제에 따라 예술의거리~전남여고~동구청 방향으로 우회 운행 한다. 또 진월 07번은 예술의 거리를 거쳐 한미쇼핑사거리에서 좌회전해 동부소방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이자 떼면 대부업법 위반 대법원

대법원 1부(민일영 대법관)는 법적 한도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뗀 뒤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받은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과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